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1
VOL. 674

2023년 국민 모두의 꿈이
날개를 펼치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올해도 국회는
열심히 뛸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January
Vol. 674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1월 2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입법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법제실장)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비서관), 윤희진(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현안 논의
국회 본회의, 638.7조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
국회 1호 시로봇 공무원 임용

11 특집 -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듭시다 _김진표 국회의장
계묘년 새해, 경제회복을 위해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_김영주 국회부의장
지금의 위기 극복해 일류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_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생제일주의로 국민 삶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_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대계 생각해 담대한 사회개혁을 이루겠습니다
_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생각의 힘'으로 가장 앞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_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4 위원장에게 듣는다 _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균형과 견제' 속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

26 길에서 길을 찾다 _이병훈 의원

아시아의 문화수도 꿈꾸는 의향-예향의 도시, 광주

30 칭찬합시다 _김민기 의원

"생활정치는 늘 강조해 온 저의 소신이죠"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임병헌 의원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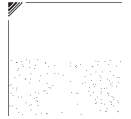
34 의원의 좌우명 _이형석 의원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36 함께하는 국회

지방화 시대 개막을 위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 개최

CONTENTS



24



26



30



32



34

39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한말채나무

40 법률 시대를 읽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_정연호 수석전문위원

42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자산불평등 심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50 의회외교 포커스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능동적 의회외교 _황승기 국장

52 주재관 리포트
답은 시스템에 있다 _주성훈 주재관

56 새 법률 소개
‘만 나이’ 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등 제·개정안 본회의 의결

60 위원회는 지금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 및 이태원 국정조위 현장조사 실시

64 이달의 청원

65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66 국회 뉴스

72 법 시행 그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74 만화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76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코로나19 전쟁에 투입된 인공지능

78 국회 사람들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국민에 ‘친근한 국회’ 만들고 싶어 _김다운 사무관

80 이달의 서평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_박효민 교수

82 고전에서 읽는 지혜
북학론자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 _박석무 이사장

84 국회 미술관
대한민국의 빛장을 연 주역들 _김준기 미술평론가

88 속기록으로 본 이달의 의정소사
발언시간 제한이 없던 그 시절 _강지유 사무관

90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제주 사라오름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94 생활 속 우리말글
문법에 맞는 문장과 명료한 의사 전달 _김풍기 교수

96 정치 관련 주요 일지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제21대국회 하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김진표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현안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2월 6일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월 6일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폭 주석의 방한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 교류는 약 2천 400배 증가했다.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 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고,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도 8만 명이 넘는다”며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

트남 관계를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 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월 6일 응우옌 쉰언 폭 국가주석 등 베트남 측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상기하면서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 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 주석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중국해 질서 수호를 위한 해양안보협력 강화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과 폭 주석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폭 주석은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년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2021~2023년 P4G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지지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폭 주석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 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핵확산 방지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생각이나,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북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 본회의, 638.7조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의결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다.

국회는 12월 23일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24일 제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의결한 총지출 기준 내년도 예산안(638조 7천억 원)은 정부 제출안(639조 원)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 9천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천억 원이 순감액됐다.

수정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3천525억 원 신규 반영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를 위한 992억 원 및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천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증액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증액 △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또,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천호 확대에 6천630억 원을 비롯해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 원 증액 △인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 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 원 증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자 확대비용 500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 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 의결

국회는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 대비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또, 근로소득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가운데)이 12월 27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국가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에 위촉된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27일 국회 사랑채에서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의원외교단체다. 제21대국회 후반기에 신설된 오세아니아 의회외교포럼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2개 의회외교포럼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회외교의 목표는 국익 극대화”라며 “새로 선임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의회외교포럼이 분야별 전문가와 기

업인들과 긴밀히 연계해 명실상부 ‘의회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한-미), 윤호중 의원(한-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한-미), 조정태 의원(한-일) 등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신임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의 일대 전환기”라며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는 여러 대통령들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외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적 네트워크



크를 구축하고, 정부외교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효율적이고 풍부한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며 “외교 대 전환기를 맞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외교 역량을 서둘러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국회는 의회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과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2030부산 세계박람회 지원 같은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은 초당적 의회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여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님들로 공동회장을 위촉했다”며 “12개 포럼별로 긴밀하게 소통해 기념비적인 의회외교를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은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가를 위한 외교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더욱 좋은 관계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외교 현안 중에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잘 고려해 국회가 외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의가 있고 한-러 사이의 국익 문제가 있다”며 “그 균형을 찾아서 국제사회의 대의에 맞는 책임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국익과 관련한 외교적인 길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

태 의원은 “중진의원들이라도 한번씩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익을 논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며 “제대로 된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데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의원은 “상대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한번 회장을 맡는 지역을 의원 임기 동안 계속 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일·주호영 의원(한-미 의회외교포럼 회장), 홍영표·김영선 의원(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윤호중·조경태 의원(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 이인영 의원(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 이상민·김기현 의원(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설훈·이명수 의원(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장), 김태년 의원(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 안규백 의원(한-중동 의회외교포럼 회장), 박덕흠 의원(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우원식·안철수 의원(한-오세아니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

구분	회장	
한-미	변재일(5선, 더불어민주당)	주호영(5선, 국민의힘)
한-중	홍영표(4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선(5선, 국민의힘)
한-일	윤호중(4선, 더불어민주당)	조경태(5선, 국민의힘)
한-러	이인영(4선, 더불어민주당)	홍문표(4선, 국민의힘)
한-EU	이상민(5선, 더불어민주당)	김기현(4선, 국민의힘)
한-아프리카	설 훈(5선, 더불어민주당)	이명수(4선, 국민의힘)
한-중남미	우상호(4선, 더불어민주당)	김학용(4선, 국민의힘)
한-아세안	김태년(4선, 더불어민주당)	권성동(4선, 국민의힘)
한-중동	안규백(4선, 더불어민주당)	한기호(3선, 국민의힘)
한-남아시아	노웅래(4선, 더불어민주당)	윤상현(4선, 국민의힘)
한-중앙아시아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박덕흠(3선, 국민의힘)
한-오세아니아	우원식(4선, 더불어민주당)	안철수(3선, 국민의힘)

국회 1호 AI로봇 공무원 임용



12월 13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과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이 AI로봇 공무원 국회큐아이 임용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3일 인공지능 AI로봇을 도입해 국회박물관에 배치했다. AI로봇은 박물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다. AI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 사업’으로 도입됐다.

지능형 큐레이팅봇은 전시실 해설과 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국회와 민주주의, 국회 100년 역사,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6주간 시범운행을 통해 안정

적인 서비스 구축에 성공했으며 12월 13일 완료보고회를 거쳐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능형 큐레이팅봇의 이름을 ‘국회큐아이’로 하고, 국회 1호 로봇공무원으로 임명했다. 해설·안내 등 정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회큐아이’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완료보고회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직접 공무원증을 수여하는 등 ‘로봇공무원 임용식’을 시행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완료보고회에서 “로봇해설사 도입으로 국회박물관을 찾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 잘 이해하고, 양질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시기를 바란다”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기술 실험을 하는 디지털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듭시다

김진표 국회의장

**계묘년 새해, 경제회복을 위해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지금의 위기 극복해
일류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생제일주의로 국민 삶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대계 생각해
담대한 사회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생각의 힘’으로 가장 앞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듭시다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곳곳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 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국회의장 김진표

계묘년 새해, 경제회복을 위해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부의장 김영주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아쉬움이 많았던 지난해를 보내고, 우리 국민이 모두 새롭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신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지루한 코로나19 터널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멈춰 있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서 우리 국민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이웃을 향한 배려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묵묵히 참고 버티어준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이것이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온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고,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닥뜨리며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 위기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특히 고물가 피해가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가 확대되는 지금,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고, 국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법,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직장인 식대 부담 완화 법안 등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아직 모자랍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 정쟁에 가려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던 10·29 이태원 참사의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루속히 국회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책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치,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치를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사회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작년은 선거의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속해서 치르는 과정에서 각 정당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우리 사회를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 되어야 할 선거가 갈등의 씨앗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치가 낡은 갈등과 대립은 국민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세대, 성별, 계층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

한 혐오나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단면을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세 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은 나라,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갈등의 골이 이대로 더 깊어진다면,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정책은 고사하고 서로를 향한 합리적 대화마저 단절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로를 향한 반목과 대립을 끝내야 합니다. 새해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고, 생각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달라진 정치의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유행 위기 역시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 세계 경제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해묵은 정파와 이념은 벗어던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21대국회가 약속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틔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국회가 무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최선을 다해 뛰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금의 위기 극복해 일류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 정국 상황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먼저 집권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집값 급등락과 전세난,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중고에 과중한 세금과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늪, 불의의 참사들, 노조 불법파업까지.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 경기침체, 북한 도발까지, 그야말로 경제·안보위기, 외우내환의 한 해.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정권심판,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 보여 준 국민 편 가르기,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고 깊었던 국민께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을 세워, 나라 살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아 야당이 된 민주당은 2년전 민심 유효기한이 다 한 169석의 거대의석을 악용해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하며, 헌정사·국회사에 여러 오점을 새기고, 나라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간 정부제출 법안 처리를 막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세력들과 결탁해 여러 청부입법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민께 그나마 희망을 줄 올해 정부 편성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질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수정안 처리 으름장을 놓았는가 하면, 예산처리 헌법 시한을 어기고,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겼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자 최장 지각 불명에 사례입니다.

희망과 미래를 얘기해야 할 신년 인사에, 국민 여러분과 국회 가족 여러분께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심을 억류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친 채, 정권 비협조 입법 횡포, 파괴의 정치를 일삼는 이러한 역사가 절대로 되풀이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국정운영의 발전적 파트너 관계, 국민 선택한 정권 성공위해 협력해야

이제는 바뀌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무너뜨려야 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발전적 파트너로서, 무거운 공동의 책임감과 역사적 책무를 갖고, 국민이 선택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소통과 대화, 합의와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여야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숙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더 잘 실현할 수 있

도록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여야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협치형 통치구조 국민개헌을, 중단기적으로는 상임위 단계에서 탈당 의원들을 편입시켜 꿈수로 정족수를 짜맞춰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하거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단순한 수적 우위로 강행하는 입법독재가 불가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과 퍼머크라이시스(영구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하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새 도약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월드컵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원팀 정신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새해에는 위기에 대응해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 일류강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원팀 정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협치로 온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저 역시 정부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과 아픔, 보람을 함께하며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민생제일주의로 국민 삶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불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회복의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국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내내 예산이나 입법, 정책 관련 여야 간 협의에서 항상 난항을 겪었습니다. 야당이 먼저 합의의 여지를 갖고 소통하려해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정치를 훼손하는 독단적 국정운영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경찰국 신설’ 등 국회를 건너뛴 ‘시행령 통치’,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한 부적격 인사의 임명 강행,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진한 여야합의의 파기, ‘외교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행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제출한 해임건의안 거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세 번의 처리 시기를 놓쳐버린 예산안 등 국회와 야당을 불인정하고, 협치를 불필요하다 여기는 대통령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통합과 협치는 없고 대통령 자신이 대립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고유 영역까지 지배와 간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대통령 만기 친람(萬機親覽) 앞에 여당은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뿐입니다.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89건의 정부 발의 법안 가운데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새 정부의 정치력으로 향후 4년간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민생과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며 민생과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46회의 민생현장 경청과 487건의 생활밀착 입법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해소 최소주거보장 △장애인 국가책임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등 국민 삶에 필요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는 지연되었지만 당론으로 정했던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성과라 할 것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유류세 대폭 인하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민주당의 중점법안들을 정부여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꾸준히 설득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해 여야가 합의한 ‘대선공통공

약추진기구’도 본격 가동해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특위와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는 뜻밖의 참사로 국민 모두가 아프고 시린 한 해였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스러진 159명의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큰 희생을 치르며 반복된 참사 앞에 정치권에 내린 유가족과 국민의 명령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무했던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고통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위해 반드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참사가 국가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로부터 토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도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하는 영민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위기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강인한 뒷발로 더 크게 도약하는 토끼처럼 팬데믹과 복합경제위기를 민주당이 힘차게 뛰어넘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대계 생각해 담대한 사회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10일 온 국민의 여망을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5년 내내 이어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란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경기 둔화도 심화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해 민생 악화를 막으며,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반드시 경제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활성화입니다. 수출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고 위기 때마다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 회복의 또 다른 관건은 민간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이유는 대외 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된 탓도 큼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주의 소득주도성장과 과도한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꺾었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민간경제의 자생력을 되살리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민간경제의 활력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민간 자체의 자율과 창의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설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적 규제 체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좌우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경제 회복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은 노동·연금·교육개혁입니다. 이 사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호봉제, 경직적 주 52시간제, 이 중구조, 과격 노조의 정치파업 등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 직무 성과에 기초한 보수 체계, 노사 법치주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고, 청년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2042년에 기금이 적자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고, 노후 소득 보장도 미흡하며, 세대 간 불공정성 문제도 심각해 청년층의 62%가 덜 내고 덜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납입하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하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현재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해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기업

은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사회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사회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역대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표와 로드맵을 놓고 정당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개혁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나라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대계를 생각해 담대한 사회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야당도 긴 역사적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적극 개혁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의 승패는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꺾은 것도 바로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이 있는 곳에 개혁의 길이 있습니다. 새해에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사회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생각의 힘’으로 가장 앞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품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사무총장이라는 뜻하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국가를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집이어야 합니다. 싸우는 국회의 이면에는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회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할 일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새로운 꿈을 꾸니다. 2023년에는 ‘하나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분열과 갈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전진하려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꾸야 합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원천입니다. 생각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국회가 국가 어젠다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생각의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국회, 민간 연구기관들이 어젠다를 정하고 논의하는 ‘연구조정회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미래산업 육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국의 저출생정책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20개 정부 부처에서 총 163개 과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5년 간 23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로, 매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데이터 기반의 최적의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맞물려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국회의 다섯 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국가 정책 대토론회를 해나가야 합니다. 국회의 생각의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 국가 어젠다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국회의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지식을 생산하는 싱크탱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세계질서 재편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 해외의 입법과 정책 동향을 살피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2년 여름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더 없어야 합니다. 국내를 넘어 국외 법률 정보까지 AI로 빠르게 인식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ISP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열두 기관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으로 최고의, 최적의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국회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회 될 것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입법, 정책, 예산, 외교 등은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국민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18개 위원회, 5개 소속기관이 있는 만큼, 그동안 국회의 일정들을 한 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국회', '금주의 국회' 서비스로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이 국회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회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국회를 홍보하고 함께 소통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국회의 입법, 정책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정책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정관용의 정책토론' 프로그램과 같이 국회 안에서 논점을 파고드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국회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생각의 힘으로 가장 앞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듭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휴대폰과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국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결한 문제도 있고, 어려움에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국회를 위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과 견제’ 속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에 최선 다할 것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Q. 계묘년 새해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장으로서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장기 경기침체를 비롯하여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타까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가슴을 졸여야 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국회의 균형과 견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도 거대 야당으로 인해 국회의 균형과 견제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그간 법사위 운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숙의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입법이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입법기관이 수렴하여 이를 법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 역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의의 수렴과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 검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실익을 극대화해 종국적으로는 그 이익이 국민에게 실현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역



할인 법안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 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Q. 새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A.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을 비롯한 민법, 상법 등 고 유법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을 다루다 보니 여 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현안에 대해 말씀드 리는 것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다룰 때마 다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중심을 잡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 간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이 311건에 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왜 중요 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 국가가 반성해 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 치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인 법안심사에 충실해야 할 것 입니다.

Q.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 까요.

A. 국회의 최우선순위는 첫째도 국민이고 둘째도 국 민입니다. 특히, 장기 경기침체와 세계 경제 위기 및 코 로나19 확산 등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 습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업과 자영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 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회부되어 있습니 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최우선적

으로 심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현재 법사 위에 계류 중인 고유법은 383건에 달합니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들입니다. 법사위의 심사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유법 심사 업 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거둔 주요 성과 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지난 12월 8일 부산과 수원에 회생 및 파산을 전담 하는 회생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채무자 회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을 비롯한 자영업 자 등의 파산 및 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회생 신청보다 파산 신청이 더 많아 민생 경 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러나 비수도권의 도산 사건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서 울 다음으로 도산 사건이 가장 많고 사건 신청부터 개시 일까지 소요 기간이 부산은 70.6일로 서울회생법원(28.5 일)에 비해 2.5배 정도 더 소요되는 등 재판 지연이 비수 도권 중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수원에 회 생법원을 설치해 어려움에 처한 비수도권 국민들과 기 업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 회가 되겠습니다. 🍵

글 박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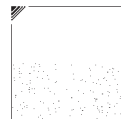
아시아의 문화수도 꿈꾸는
의향·예향의 도시,

광주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빛고을’ 광주(光州)는 본래 무주(武洲) 또는 무진주(武珍州)로 불리다 고려 태조 때부터 광주로 명명됐다고 한다. 진산인 무등산 아래 자리 잡은 호남 제1의 도시 광주는 의향(義鄉)과 예향(藝鄉)의 도시를 넘어 세계지질공원, 세계기록유산, 미디어아트 등 유네스코 3관왕 도시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 광주 동구와 남구를 지역구로 둔 이병훈 의원을 만나 광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들어 봤다.

5·18민주화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는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부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 굵은 획을 남긴 의향의 도시다.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투쟁지였던 옛 전남 도청 건물과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이뤄졌던 도청앞 분수대, 그리고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격전이 벌어졌던 금남로 등은 5·18 유적지로 남아 이제는 연중 국내외 순례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됐다.

가장 먼저 ‘5·18민주화광장’을 찾은 이병훈 의원은 “이곳이 한국 민주화의 성지, 5·18민주화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1980년 5월 수많은 열사들이 산화됐다”며 “저는 항상 이곳에서 국가권력의 참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권력을 잘 사용하면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국민을 해하는 가장 나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에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남일보 건물인 전일빌딩도 있다. 이곳은 주소가 245번지이기도 하고

총탄 흔적이 245개 발견됐다고 해 ‘전일빌딩 245’라 이름 붙여졌다. 이후 총탄 흔적은 25개 더 발견됐다고 한다.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넘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의 테마인 빛과 숲을 주제로 한 지상 공원과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곳이다. 여느 문화시설과 달리 대부분 ‘하늘이 열린 지하’로 들어간다. 전시, 공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등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민들의 소통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예술의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문화창조원의 창제작센터는 콘텐츠의 산실로 불리고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구축한 전체 콘텐츠 1천여 건 중 75%에 달하는 810건이 창·제작 콘텐츠일 정도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하늘마당 입구에서 문화창조원을 잇는 외부 에스



아시아문화전당

컬레이터가 신설되고 동명동과 5·18민주광장을 잇는 브릿지 지상난간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공사도 마무리돼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좋아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횡포와 군부독재, 국가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았다. 옛 전남도청과 5·18광장은 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진 아픔과 희생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아시아 문화전당은 서구의 눈이 아닌 아시아의 눈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아시아인의 집”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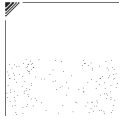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으로 일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등을 담당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는 2021년 2월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했다.

“5·18의 유적이 모두 여기에 집중돼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주요 시설들을 지하에 넣었습니다. 또 광주는 원도심에 공원이 별로 없어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지상에 높은 건물로 짓자는 의견이 많아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만들길 잘했다는 평가가 많아 보람 있고 뿌듯합니다.”

근대 광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남구 양림동

광주 남구에 자리한 양림동은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와 정착한 동네로 ‘광주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며 근대 서양식 교육·복지·의료·예술 활동이 이뤄진 곳이다. 지금도 개화기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광



전일빌딩 층단 흔적을 설명하고 있는 이병훈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펭귄마을

주기독병원, 호남신학대, 수피아여고 등이 남아 있고 호남신학대 캠퍼스 안에는 선교사 22명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양림동에는 명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펭귄마을’이다. 골목길을 다니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마치 펭귄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주민들이 시계, 그릇, 가구 등 생활 속에서 수집된 고물을 모아 예술작품을 만들고 설치한 것이 유명해져, 현재 공예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젊은 창작 예술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 의원은 “펭귄마을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회 등원 이후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의원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대통령 비서실, 광양군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장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광양군수 시절 광양매실을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을 맡아 ‘광주형일자리’를 성사시켰다.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와 문화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골목경제 회복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미디어창의 도시 사업을 전개해 빛의 도시, 빛의 천국으로서의 광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에는 5·18 등 광주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광주 정신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문화가 우리의 힘이자 먹거리이고 미래입니다. 국민 삶을 치유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광주: 글 고영선 사진 김지범

“생활정치는 늘 강조해 온 저의 소신이죠”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을)



서일준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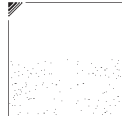
(국민의힘, 경상남도 거제시)



1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김민기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서일준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종진 정치인이시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서일준 의원님 덕분에 과분하게도 신년호 첫 칭찬주인공이 됐다”고 웃으며 “같은 상임위 소속 서 의원님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정부 정책의 장단점을 짚어내시는 분인데, 저의 작은 노력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기초의원인 용인시의원에 당선돼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제19대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20대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보위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정치와 행정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됐지요. 지방의회에서의 경험이 국회의원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인 생활정치 실현’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강조해 온 소신입니다.”

김민기 의원은 “마침 오늘 기부를 한 날이라 의원 배지가 아닌 이걸 달게 됐다”며 가슴에 달린 사랑의 열매 배지를 가리켰다. 김 의원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2006년 용인시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를 이어 오고 있다. 현역 의원 중 가장 오래됐다고 했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번씩은 월급을 기부하려고 마음먹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웃었다.

김민기 의원은 제21대국회 활동 중 2014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심어져 있던 일제 잔재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한국 전통 수종 나무로 교체한 일을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2013년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가이즈카 향나무 850여 그루가 식재돼 있었는데, 제가 청원을 제출한 다음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국 전통 수종으로 교체하게 됐지요.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 있는 전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의 모든 현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국토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의 모든 현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슈가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KTX 열차 사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문제 등이 모두 국토위의 굵직한 현안들이고, 또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공급정책, 도시재정비사업,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민생의제도 많습니다.

올해도 국민 생활에 힘이 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현안도 빼놓지 않았다. 제19대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과 용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은 급격한 인구 성장 속도에 비해 도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지역 중 하나”라며 “국토 남북-동서 연결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용인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로와 철도, 광역대중교통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 한분 한분이 제 이웃이고 제 삶의 동료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생을 우선으로 국민께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을 칭찬합니다

“강대식 의원님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인상 깊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21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장병의 처우 개선과 보훈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군사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대한민국이 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강 의원님의 깊은 마음과 인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 될 것”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3선 구청장 출신의 임병헌 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구청장 시절 그의 별명은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누빈다고 해서 ‘운동화 구청장’이었다. “약속을 지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대구에서 생활한 임병헌 의원은 유년 시절에 대해 초등학교만 4~5차례 옮겨 다녔다고 회상했다. 임 의원은 “아버지가 교사여서 전근하실 때마다 전학을 갔다. 장티푸스에 걸려 3개월 동안 결석을 한 적도 있는데, 학교에 못가니 공부나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느꼈던 기억이 난다”며 미소 지었다.



영남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문화체육국장, 교통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남구 부구청장도 역임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했고 이후 2018년까지 내리 3선을 했다. 당시의 구청장 출마 결심에 대해 임 의원은 “대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낙후된 원도심인 남구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운동화 구청장’으로 불렸는데, 구청장으로 12년간 일하는 동안 구두와 양복보다는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붙은 별명이다.

“현장을 자주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스마트폰도 자주 활용했습니다. 소형차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현장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사진을 찍어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차분하게 설득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보니 주민분들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기 시작하더군요.”

구청장 재직 동안 그는 미군 부대 부지 일부 반환을 통해 대구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인 3차 순환선 미개통 구간 중 영대네거리 동편 도로 개설을 추진, 확정했고, 반환 부지에 대구시 대표도서관을 유치했으며, 평화공원 조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구시가 8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청소행정평가에서 남구청은 1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3선 구청장을 마친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지 못하다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 무공천 방침을 밝히자

그는 보궐선거 완주를 위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소속 당선 이후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복당했다.

임 의원은 “무소속이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 총회도 참석하지 못했다. 소통창구가 부족하니 답답하고 불편함이 많았다”며 “무소속으로 있는 기간이 당의 중요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지만, 국회의원은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국회의원이 광역·기초단체장, 시·군·구의회와 적극 협력한다면 서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 등 현안 해결 노력

임병헌 의원은 대구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중요한 사업이 있는 만큼 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 임 의원은 “미군 부대 이전은 단순히 군부대 하나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전력(戰力) 개편 문제까지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라며 “미군 부대 이전 문제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차근차근 지자체장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 큰 흐름 속에서 3차 순환선 완전 개통, 남구청사를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조지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3선 구청장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지역과 국가를 위해 뛰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후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이형석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고교 시절 교훈인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을 만나 그의 좌우명과 의정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제가 졸업한 순천고의 교훈이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었습니다. 교훈이 평범하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더군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이형석 의원은 학생운동에 몸담을 겨를도 없이 휴학하고 복학하며 ‘5·18 성장통’을 견뎌냈다고 했다. 졸업 후 1987년 그는 광주은행에 입사해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당시는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였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보니 금융노조의 노조위원장을 대의원들이 간선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몇몇 선배들과 함께 직선제 투쟁을 벌여 1989년 위원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등 노동조합 개혁과 혁신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1998년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2000년 비례대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IMF로 시중은행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던 때라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 후 2002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4년까지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당시 39세로 전국 최연소 광주시의회 의장에 오른 그는 광주시의회를 혁신적으로 바뀌나갔다.

“당시만 해도 지방의회의 본회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회의도 공개되지 않았습시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시를 견제하거나 감시하기 어려웠고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태로 실시하고 이를 케이블 TV로 중계하도록 했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일련의 의회 개혁작업을 통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의정대상을 휩쓸기도 했지요.”

이 의원은 최연소 시의회 의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후 여의도 입성까지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했다. 2006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그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거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 의원은 “일련의 실패를 겪으면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라는 좌우명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챙기고 확장적 정치문화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이형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역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왜곡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형석 의원은 후반기에는 지역 현안도 열심히 챙길 계획이라고 했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도로 공사도 최근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또 향후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3대 전략사업으로 AI집적화 단지 조성, 미래차 산업육성, 바이오 헬스 기반 조성도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석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다”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전국 정당에 대한 그분의 신념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산에서 민주당 출마를 고집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뜻을 따라 확장적인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지역정당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87년 체제를 벗어나는 개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

글 김현아

※ 여야 의원들이 공통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현장을 찾아 소개하는 '함께하는 국회' 코너를 1월호부터 시작합니다. 첫 행사는 9명의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건설에 대해 논의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를 소개합니다.

지방화 시대 개막을 위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 개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화 시대 개막을 위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수서~서원주 신(新)중앙선 연결' 및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김형동·박정하·박형수·이종배(이상 국민의힘)·소병훈·송기현·임종성(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명수·박대출·박성민·이만희·박대수·전봉민·정동만·이인선 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수서~서원주 신(新)중앙선 연결 사업'과 충북선 오송~원주 간 고속화 구간의 제천역 경유 필요성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경기도~강원도가 연결되도록 해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수서~서원주 신중앙선 연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충북 및 경북지역 주민들에게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북선 오송~원주 간 고속화 구간의 제천역 경유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수서역과 경기 광주를 잇는 수서~광주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서~광주선은 경강



출처: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 자료집

선인 부발(이천)·여주를 거쳐 원주(중앙선)와 연결되면 수서역에서 KTX-이음으로 강릉선, 중부내륙선, 중앙선을 통해 국토 내륙지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게 된다. 충북선 오송~원주 간 고속화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서~원주로 이어지는 신중앙선 연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북, 경북권 지역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국토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계획에 따른 오송~원주 구간 고속철도는 지역 거점인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강원~충청~호남 및 경북 지역 노선 이용 시 추가 환승이 필요하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화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다”며 “중양선과 충북선, 태백선의 교차역인 제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충북선 고속철도가 운송·물류·교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노선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천·단양을 포함한 충청권이 진정한 사통팔달 교통망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수서~서원주 고속화철도사업은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통망 설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면 지역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양질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도로교통 혼잡을 해소하며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발 신중양선은 경기~강원 간 동

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서~광주’ 그리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뭉쳐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신중양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형수 의원은 “고속철도망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희 지역구인 경북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속철도망 구축이 더딘 상황이라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중양선이 완공되면 영주에서 수서까지 58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중양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KTX 철도망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각 도시를 편리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정부 주도의 과감한 철도사업 투자를 기반으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가철도망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현재 청량리역~망우 간 철도 선로용량은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노선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수서에서 서원주를 연결하는 고속전철 연결사업은 새로운 교통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가 심리적·경제적으로 한동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도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 중양선의 종착지인 청량리역은 서울 중심부와 떨어져 있어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라며 “중양선의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강남 지역의 탑승 접근성 향상으로 내륙지역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서~서원주 신중양선 연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와 여주를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서역의 규모를 대폭 키우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추후 경북 안동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놓일 수 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경제활동 거점 육성해야”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진석 한국철도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

구관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는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질적·양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이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계획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 천안역과 동대구역 등을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하며 “수도권 접근성만 향상되면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블랙홀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동의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중양선 개통이 강남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인구, 산업, 관광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천·단양은 충북 관광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충북선 고속화는 호남~고속선~충북선~중양선~원주강릉선 연계로 호남~충북~강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선의 종점인 봉양에서 원주방면 연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힌 뒤 “봉양역 주변 신도시 개발로 제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수서발 신중양선 서원주 연결 사업과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철도 사업은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협력과 상호발전이 가능한 만큼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업그레이드돼 철도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유키



겨울을 붉게 빛내주는 ‘흰말채나무’

추운 겨울에 유난히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빨간 가지가 아름다운 ‘흰말채나무’입니다. 홍서목(紅瑞木)이라고도 불리는 흰말채나무는 가지는 붉은색이지만 줄기의 속과 열매가 흰색이고 가늘고 긴 가지가 탄력적이라 예로부터 말의 채찍으로 사용됐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5~6월엔 흰열매와 꽃을 맺고 겨울이 되면 가지가 붉게 물드는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포함해 유료로 제공되는 모든 영상물은 공급 또는 상영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상물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등 이른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처리 대상 영상물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 처리기간이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가량 연장된 10일로 나타나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상물 등급분류 지연은 콘텐츠의 적기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의 효용 감소와 사업자의 영업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9월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23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구체적인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운영 계획 및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고,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이수,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해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의무 준수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기반을 구축해 관련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동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게임시장에서 나타난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을 낮춰 분류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보완하도록 규정해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논의 사항 및 향후 과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OTT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등의 자체등급분류를 신고제로 할 것인지 지정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자체등급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신고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자체등급분류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등급분류 업무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반해 문체부 장관의 지정제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등급분류의 공정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정요건이 강화될 경우 규제완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감안해 지정제로 하되, 3년간 제도 모니터링 실시 후 신고제의 전환을 포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도록 법안심사보고서에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OTT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 자산불평등 심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를 비롯한 회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인수 가천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도시 로드맵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로드맵 개념 및 국내외 도시 현황, 제로신도시 로드맵 추진방향, 하남시의 역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 김용춘 법학박사는 세계 여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발제를 통해 하남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질의응답으로 이어나갔다.

·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주택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부문이 주택시장의 질서와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을 모색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정책을 목표로 삼아 공적 보증 확대와 분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집중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 단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익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제성장기에 수립했던 주택정책이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취약한 주거환경 등 주거정책 현안을 살피고 주택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 론회

김교홍·김철민·이성만·이해식·이형석·천준호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12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020년 10만 명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지난해 4월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북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등이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 노동·정치기본권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김희재·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형두·홍석준(국민의힘) 의원은 12월 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각지대 골목상권 등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상인 전용 T-커머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원석연 경성대 융합학부 소프트웨어플랫폼 전공 겸임교수와 권순중 우리동네 홈쇼핑 추진단장이 각각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시장 진입 방안’과 ‘상인 전용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 구축 최적화 모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을 좌장으로, 이병희 한양대 교수와 정재필 안양대 교수, 한승주 전국상인연합회유동사업위원장, 박윤정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허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구축의 최적화 방안으로 상인의 경영 환경 분석 및 TV홈쇼핑 필요성과 상인 홈쇼핑의 사업 전개 방향, 상인 홈쇼핑 운영 모델, 상인 홈쇼핑 차별화 전략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눴다.

·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최연숙(국민의힘) 의원과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12월 총 3회에 걸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 6일에 진행된 1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를 주제로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원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담당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12월 7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으며, 이어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 유희정 전 한국보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3차 토론회는 12월 8일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을 주제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박복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이어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제4차 및 제5차 정책토론회는 1월 10일 ‘남성의 돌봄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월 11일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확보 및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륙양용버스 등 복합형교통수단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교통법령 체계는 도로, 수로, 항공로 등 교통로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복적 규제와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동수 목포해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수륙양용버스를 생산·운영중인 이성준 GMI그룹 대표이

사, 임준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오 국토교통부 과장, 박종광 해양수산부 사무관, 안기영 행정안전부 주무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복합형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합등록면허제도 및 안전검사제 등 체계적인 규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결과 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 발주했던 입법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보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이 ‘한국사회 직장 내 민주주의 실태와 전망’,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토론을 맡았다.

•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토론회

재외동포처를 설립하고, 재외동포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설훈·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2월 12일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월 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을 일부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를 설립하자는 법안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처 설립에 힘을 실으며 “독립적인 사무와 예산에 대한 권한, 국무회의에 출석해 직접 발언하는 기회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고 공관투표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이 높다”고 우편투표의 장점을 설명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재외동포 ‘청’보다는 ‘처’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과 김훈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유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 경영악화의 가속화, 주유소 폐업 급증에 따른 막대한 사후적 비용 발생을 고려하며 효율적 사전 대응 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고,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혁신하거나, 주유소의 전·폐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5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어업현장의 많은 부분이 여성어업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여성어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종천 부경대 박사가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임우연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박사가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4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여성어업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밖에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어업기자재 지원 등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

12월에 개최된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안내(12.1~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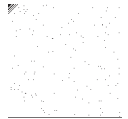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2.1(목)	국가 정체성과 안보 가치관 확립: 시대적 혼란과 혼돈의 시기 극복을 위한 학술 토론회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제2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상관관계	고영인·인재근·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	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강선우 의원실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주택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김민기 의원실,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니어 ROTC 프로그램 발전 및 법제화를 위한 방안	서병수·이현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김윤덕·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국회 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국회 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2.2(금)	미·중 전략경쟁 시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확대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김민석·강득구·강민정·강선우· 고민정·고영인·김영호·김철만· 배진교·용혜인·천준호·최혜영 의원실, 약자의 눈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회의원 집담회	김영배·이명수·최형두·김종만· 이은주·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교흥·김철만·민형배·용혜인·이성 만·이해석·이형석·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조승래·김영호·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지역가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방안: 2022 대학창업교육 국회포럼	유기홍·서동용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광주·전남이 함께합니다	양향자·김화재·양향자·이용빈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토건 비라·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김병가·기동만·김승원·홍기원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입법자연맹 성립대회	홍영표·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2.5(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국회 포럼: 과학기술계 혁신을 통한 국가 미래선도	권성동·변재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최형두·김화재·이정문·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	김병욱·안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강선우·강은미·김민석·서영석· 최연숙·최혜영·한정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	윤주경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2회차,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캐릭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제1회 스타트업 트립: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	강훈식 의원실	여의도 Switch22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2.5(월)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홍걸·정준숙·김승남·양경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 제고방안 토론회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2.6(화)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발명챌린지로 구현하는 대한민국 안전기술의 현재와 미래: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컨퍼런스	송기현·송재호·양금희·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ESG 경영환경조성과 정책기반 구축 전략 세미나	김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심상정·박홍근·양정숙·강은미· 류호정·배진교·윤호중·이동주· 이은주·장혜영 의원실, 정의로운녹색전환국회포럼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전전략 포럼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김상화·이명수·윤재욱·태영호·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위성곤·이원택·강은미·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홍걸·김승남·윤미향·윤재갑· 주철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섬김의 리더십: 지금, 더욱 절실한 지도자의 덕목	박찬대·이명수 의원실, 일치를위한정치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2.7(수)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 토론회 1차 토론회	남인순·박광온·양금희·최연숙 의원실,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엄태영·김선교·김형동·박정하· 박형수·소병훈·송기현·이종배· 임종성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구 소멸 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 토론회 2차,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인순·박광온·양금희·최연숙 의원실,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이동주·김태년·홍성국·김경만· 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 양이원영·오기형·이용우·정일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	서병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륙양용차량을 중심으로	조웅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아동학대 없는 돌봄현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	김선교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서정숙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8(목)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여기구·김병욱(국)·서동용 의원실, 국회철강포럼	컨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
	인구 소멸 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 토론회 3차,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남인순·박광온·양금희·최연숙 의원실,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2.8(목)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이은주·김영진·노용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비)·이학영·전용기·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2.9(금)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	박용진·전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현행 유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적 유연보관제도의 필요성과 민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김상희·인재근·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상생룸
	삶의 존엄한 마무리, 우리의 선택	서정숙·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김홍걸·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희재·박대출·배진교·윤미향·정필모·최종윤 의원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2.12(월)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설훈·이원욱·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임오경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안전 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이인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23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	이원욱·김석가·김병욱(인)·강득구 의원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글래드호텔 여의도 LL층 볼룸A홀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김성환·이소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 방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 국회물포럼 제20차 토론회	변재일·정희용 의원실, 국회물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2.13(화)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	조명희·변재일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제1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조달청 공공선 낙찰제도 개선: 한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속산업 추진방안	이달곤·윤한홍·최형두·서일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 방안마련 세미나	권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강선우·김상희·김태년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9 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	박성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이은주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일환경건강센터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수립 방안 모색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2.14(수)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감속유도시설 개선방안 토론회	강대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신현영·이종성·최재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윤미향·소병훈·안호영·강은미·윤준병·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12.14(수)	훈민정음 법 제정 추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전시회	홍익표·이용호·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3층 로비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용혜인 의원실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
12.15(목)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여성어업인포럼 국회 정책 토론회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3	이상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필요성	허영·정춘숙·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 -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개발과 산업화 전략	박형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우원식·김성환·양이원영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2.16(금)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제27회 한국세무포럼	용혜인·이성만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안규백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돌봄학교(전일제교육) 정책토론회	김병욱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국제심포지엄	윤미향·서영교·인재근·홍익표· 소병훈·송옥주·신정훈·이재정· 강민정·강은마·고영인·김용만· 김홍걸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 방안 시민대토론회	이달곤 의원실	인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12.19(월)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 안전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송옥주·이원욱·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김윤덕·강훈식·김경협·김두관· 김병욱·김수홍·민홍철·박상혁· 박찬대·유정주·이개호·이병훈· 이상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	인재근·김상훈·서영석 의원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 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서영교·김한정·신정훈·김주영· 박영순·이동주·이장섭·정일영· 이수진(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20(화)	김한규와 경제 읽기: 시즌3, 1강 부동산시장: 다르게 보면 보이는 것들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 혁신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역량 강화 방안	국회 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책 세미나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	윤상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김성주·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정책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강병원·김성원·박상혁·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능동적 의회외교

2023년 의회외교 추진방향

2022년은 전통적 위기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기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국제정세 불안정이 확대되었던 한 해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이밍워크(IPEF)를 주도해 출범시키고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되고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이 승인되는 등 각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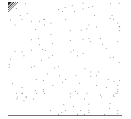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력하는 동맹외교의 공백을 메워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외국 의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현안을 해결하는 데 의회외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요 추진 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합적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2023년에 의회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국가의 중요한 경제현안을 해결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국회 경제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분야인 K-방산과 원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잠재 수출국의 의회 최고위급 인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에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각국 의장에게 방산 및 원전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한 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황승기 국장
국제국



있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정부 고위인사와 교류를 확대하며 포괄적인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IRA도 주요 경제현안이다. 세액공제 규정 이행 유예를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통과 등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상·하원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

둘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의원친선협회 등이 함께 초당적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국회-정부-민간이 함께 협업체 달성해야 할 목표다. 최종 개최지는 올해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그 전까지 국회는 외교부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과 협력하여 입장이 미정인 국가를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문 외교는 물론 다양한 초청사업을 통해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초청으로 방한한 튀르키예-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부산세계박람회 설명회에 참석하고 엑스포 예정 부지를 방문한 바 있다.

셋째, 의회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 이슈에 대응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미국·일본 간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의원회의를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의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 ‘제4차 지속가능

발전(SDGs)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다.

넷째, 의회외교 성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회외교 역량과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2022년 9월에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특정현안외교 등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외교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그리고 주요국에서 활동하는 국회주재관 등이 우리나라의 중요 외교현안과 관련되어 국회 및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상임위 등에 공유해 국회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것이다. 특히, IRA와 같이 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경우, 이를 조기에 포착해 정부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맺음말

의회외교활동이 체계적인 전략하에 수행되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에 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경제외교 현안을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정부-민간 협업체 방안을 자문하는 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외교환경 복잡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 속에서 국회는 외교역량을 결집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인 의회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가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답은 시스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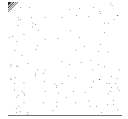
주성훈
국회 독일 주재관

5why 기법이 있다. ‘왜’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5번 던져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외벽이 부식되는 현상을 놓고 ①왜 부식할까? 화학세제를 많이 사용해서 ②왜 화학세제를 많이 사용할까? 비둘기 똥이 많아서 ③왜 비둘기 똥이 많을까? 거미가 많아서 ④왜 거미가 많을까? 나방이 많아서 ⑤왜 나방이 많을까? 기념관 불빛이 밝아서. 결국 기념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방식으로 외벽부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독일 주재관으로 지낸 3년 동안 독일을 통해 한국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독일은 어떻게 극복했으며,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는지에 대해 5why를 적용했고 답은 시스템에 있었다.

연방제로 권력분립하고 연정 통해 책임정치 실현

독일에서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먼저 ‘연방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연방과 주(州)로 수직적으로 나누고, 연방정부 및 16개 주정부 모두 ‘연정’을 통해 정부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입법부는 양원으로 나누고, 사법부 역시 분야별로 연방대법원(민·형사),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으로 나누어 최고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검찰청은 각급 법원의 관할 내에 설치하고,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찰권력 역시 연방경찰-주(州)경찰-연방헌법수호청으로 나누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정치 시스템을 연방제-연정-선거-정당-정치인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연방제로 실질적 권력분립을 실현한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의회권력과 정부권력이 융합돼 있고, 이러한 권력 집중에 대해 16개 연방주 대



표들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이 견제와 균형을 담당한다. 기본법에 명시된 연방과 주(州)간 권한배분을 통해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연방상원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력분립을 구현한다. 상하 양원의 집권세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원의 집권세력이 다를 경우 중재위원회가 빈번하게 소집된다.¹⁾ 주정부 임기는 주헌법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일반적으로 4년이나 5년) 독일 전체로 보면 거의 매년 선거가 실시되고, 연방의회 총선 후 실시되는 주의회 선거를 통해 집권연정에 대한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2021년 9월 제20대 총선으로 올라프 숄츠 총리를 수반으로 신허트연정(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수립됐고, 연정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개혁방안인 시민수당법안이 지난 11월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슈뢰더 정권에서 시행한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개혁조치인 하르츠 IV(구직자 기초보장) 대신 시민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제재조치로는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방식으로 6개월의 신뢰기간(Vertrauenszeit)을 부여했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나 기민당이 연정에 참여한 주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연방상원 과반수인 35표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후 연방의회(16인)와 연방상원(16인)의 대표자 32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소집해 동 법안을 재논의했고, 유예기간 단축, 저축자산 축소, 신뢰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됐다.²⁾

독일은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연방상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연정을 통해 정부 권력을 나누고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독일에서 연방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나치 1당 독재의 아픔을 경험한 독일은 한 정당에 과반수를 준 경우가 없으므로 총리를 배출하려면 연정 구성은 필수다. 즉, 재적과반수를 얻기 위해 연정을 구성해야 하고, 연정 구성을 위해 정당들은 대화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우파, 중도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하나 좌우를 뛰어넘어 대연정(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우리나라로 치면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등 연정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정에 참여해 공동정부 지분이 있으므로 장관 임기 4년 동안 책임정치가 가능하며, 연정협약서는 정당들의 선거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정당이 얻은 득표수는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

셋째, 독일식 완벽주의가 반영된 선거시스템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수는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독일은 1인 2표제(지역구와 정당비례대표)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구에서 초과의를 인정하되 균형의석(보정의석)으로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 비율이

1) 1972~1980년: 하원 사민당, 상원 기민당, 1991~1998년: 하원 기민당, 상원 사민당, 2002~2005년: 하원 사민당, 상원 기민당으로 중재위원회가 다른 입법기보다 빈번하게 소집됐다.

2) 중재위원회 수정안은 ①시민수당을 받는 최초 유예기간(Karenzeit)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②유예기간 중 주거비 및 난방비를 지원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6만 유로(가구 구성원 당 3만 유로 추가)'에서 '4만 유로(가구 구성원 당 1만5천 유로 추가)'로 축소 ③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6개월의 신뢰기간(Vertrauenszeit)을 폐지하고, 1차 의무 위반의 경우 1개월 동안 기준금액의 10% 감액, 2차는 2개월 동안 20% 감액, 3차 위반은 3개월 동안 30% 감액의 3단계 제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조정되므로 소수자의 의사까지 반영할 수 있어 다당제 의회구조가 형성된다. 2017년 제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원내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제하고 원내정당이 얻은 득표수 비율과 연방의회 의석수 비율은 정확하게 일치한다.³⁾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5대 헌법기관⁴⁾ 중 연방대통령과 연방총리가 의회에서 간선되고 연방의회만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로 일원화되어 있다. 독일은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의회 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시스템이 공평하고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소선거제 다수대표제의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이 아니므로 국민들은 사표에 대한 걱정 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신 있게 투표하고, 이는 다당제 의회 구조 및 연정을 통한 합의제 정치시스템과 연결된다.

이념정당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발굴

넷째, 독일은 이념정당(가치정당)이다. 보수 진영의 기민/기사연합과 진보 진영의 사민당을 중심으로 이념정당을 구축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합집산을 통해 신생정당이 창당되거나 비대위원회나 혁신 위원회를 만들고 정치 무경험자들이 새로운 인물 수혈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민당은 1875년에 설립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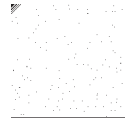
고, 비교적 신생 정당인 좌파당이나 녹색당의 경우에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 당명을 바꾸지는 않는다. 정당과 연계된 정치재단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견고히 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 총선 전 선거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은 국민들이 정당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독일의 안정적 정치 시스템은 이념정당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발굴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대중정당에 가깝고,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주의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당이 살아남는 구조이므로 이념정당이 형성되기 어렵다.

다섯째, 정치는 전문가 영역임을 인정한다. 독일에서 정치는 이해충돌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협치와 조정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정당의 수장으로 추대되거나 총리로 나서는 경우는 없다. 독일은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중복입후보를 허용해 유능한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 연방의회에 진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⁵⁾ 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중앙당이 아닌 지역의 당원총회나 대리인총회에서 비밀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치력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은 사람은 연방 의회에 진출해 정치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14~16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정당 청소년조직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해 주의회를 중심으로 경

3) 2021년 제20대 총선의 경우도 정당이 얻은 득표수 비율과 의석수 비율은 거의 일치하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정당인 남슐레스비히유권자연합(SSW) 소속 슈테판 자이들러(Stefan Seidler) 후보가 지역구에 당선되고, 좌파당이 4.9% 지지율로 5% 봉쇄조항에 걸려 원내 진출에 실패할 위험이 있었으나 지역구 3석(베를린 2석, 작센 1석)을 획득해 원내 진출에 성공하며, 2021년 선거법 개정으로 최대 3석의 초과의석에 대해서는 균형의석을 보장하지 않는 완화된 비례제 등의 영향으로 제19대 총선과 같이 득표수 비율과 의석수 비율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4)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상원, 연방총리, 연방헌법재판소

5) 2021년 9월 26일 제20대 총선에서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이예원 의원은 아헨(Aachen)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연방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장관 당시(왼쪽)와 총리 시절의 앙겔라 메르켈

력을 쌓고, 여기에서 정치력을 인정받으면 연방의회에 진출한다. 연방정부 의회차관(정무차관) 제도를 운영해 젊고 유능한 의원들을 차관으로 임명해 장관 부재 시 연방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미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독일 주재관 생활에서 받은 첫 번째 문화충격은 메르켈 전 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원고도 없이 2시간 동안 곳곳이 서서 의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방가족노인청소년부를 방문했을 때 역대 장관에 포함된 메르켈 사진이었다. 메르켈 전 총리는 1991년 1월 18일부터 1994년 11월 17일까지 연방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했다. 메르켈은 2005년 총리가 되기 전에 1991년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국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끊임없이 검증받았다. 독일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국가 지도자는 없다.

맺음말

독일의 합의제 정치시스템은 득표수와 의석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거제도-다당제 의회구조-대화와 합

의를 통한 연정구성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연방제-양원제를 통해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선거시스템)-양당제 의회구조-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양분되나 정부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해 양당제 과점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국가적 중대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기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시되어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좋은 제도는 도덕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국가체제 아래서만 국민의 훌륭한 도덕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2014년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동물국회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리에게 맞는 더 좋은 선거-정당-의회 ‘시스템’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다. 🍵



‘만 나이’ 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등 제·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4차)를 열고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연동제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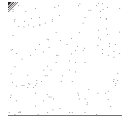
본회의에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나이를 셀 때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만 나이 통일’은 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나이 표시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굴착

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특가법’의 적용이 되는 대상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의 운전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도주치사상죄,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 지자체장과 협의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고,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장은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한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지자체는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주민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 오용가능성을 배제했다. 한편, 개정법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통신 재난’ 대응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처리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 시간 동안 중지되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통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시설규모·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동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접근통제, 감시, 물리적·기술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해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선순위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간 협의로 자녀 중 1명을 수당 받을 사람으로 정한 경우 그 자녀 1명,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 두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면 자녀 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날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제조를 위탁받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탁기업이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조정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등을 적시하게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법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어촌 살리기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민관협력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법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제정법에 따르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를 해결하고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중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민간 운영기관이 이행 조건을 위반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실시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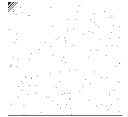
현행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도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하 ‘채무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이주계획,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체납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해외 이주 또는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됐다. 개정법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별도 요건 없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12월 8일 본회의 의결 법안

법률안	처리일	위원회	법률안	처리일	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8	법제사법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방송 정보통신 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과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 위원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 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실시

연금개혁특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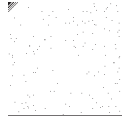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 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적립금이 3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 국민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다만 수령자 대부분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아직은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갖춰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연금특위에서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연금개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을 함께 논의하며 시행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공청회의 진술인은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등 4인으로 구성됐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부처 입장을 진술했다.

김윤 교수는 “핵심적인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는 권역간 격차가 커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 환자, 입원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의사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단순하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 핵심 인력 양성,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수련 후에 경력 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광역 시도 중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도 OECD 국가 중 후주에 이어 5위 수준에 해당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정치적 이해로 의대가 신설되면 건보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국방위원회 이현승 위원장과 김병주·김영배·설훈·안규백·한기호 의원은 12월 19일 국회에서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의원을 단장으로 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한-유럽의회 간 국방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 의회는 꾸준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EU 간의 우호 협력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과 EU국가 간의 교류협력 이외에 한-EU 간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상호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가 향후 전세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안보위협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향후 양측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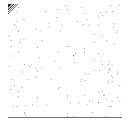
이현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필요성을 유럽의회 대표단에 역설했다.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조사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가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현장조사는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있던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튼호텔 옆 골목길로 향했다. 우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8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 위원들은 곧장 이태원파



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진선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그날 오후 9시에 코드제로(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가 발령됐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 김교홍 위원도 “코드제로가 발생한 뒤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코드제로가 100여 건, 상황 따라 200건까지 간다. 코드제로가 상황팀장한테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스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상황팀장이 자체적으로 검색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특히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병가를 내고 이날 현장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당시 현장 책임자가 와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쟁점이 됐다.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은 “초반에는 수사 때문에 국회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하더니 국정 조사를 하러 나오니 타임라인을 짜 맞춘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분향소 한분 한분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위는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2회)·기관보고(2회)·청문회(3회) 일정, 기관증인 등 회의 운영 관련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12월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29일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2023년 1월 2, 4, 6일 진행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

이달의 청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5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아야 하며,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처리된다.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110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이 60건, 국민동의청원이 50건이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3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1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은 연쇄 성범죄자 박모씨가 수원 화성시에 거주지를 정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연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둘째,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에 관한 청원’은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를 통합·주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윤상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정보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군복무 휴가 중 연고지 지자체의 협조요청과 소속 군부대의 지침에 따라 대민지원 작업 중 우측 시력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으나 국가유공자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 해당 여부를 재심의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 (소개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	이**	법제사법	12. 5.	국민동의청원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에 관한 청원	최지영 (윤상현 의원)	정보	12. 12.	의원소개청원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윤범석 (이형석 의원)	정무	12. 14.	의원소개청원

국회 로봇 선생님 ‘큐아이’ 반가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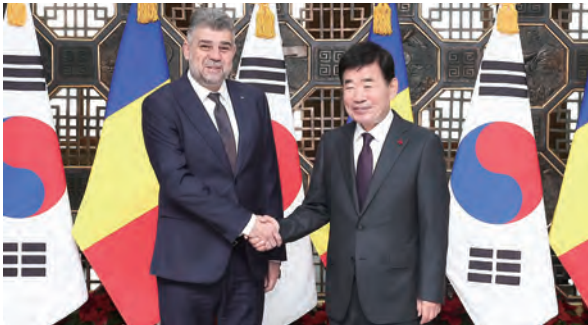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국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책으로만 접해 어렵게 느껴졌던 국회가 ‘큐아이’라는 로봇 선생님 덕분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곳 저곳 설명해주고 함께 둘러보니 참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이영리(경기도 고양시)

NEWS

김진표 국회의장,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월 21일 국회접견실에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방산·원전 실질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는 니콜라에 이오넬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도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을 계기로 의회·행정부 양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 당시 양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루마니아 의회 및 행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내년 2월 중으로 우리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이에 “루마니아는 아시아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2.7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및 9조 원 규모의 원전 신규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

업의 참여도 희망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루마니아가 운영 중인 원전 노형(CANDU)과 동일한 원자로를 운영 중이어서 관련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한국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원전 협력이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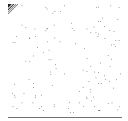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가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혹해 연안에 위치한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 콘스탄차와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부산과 콘스탄차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크리스마스 쉼·적십자 특별회비·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성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월 7일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대한결핵협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부·나눔단체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진표 의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힘든 요즘, 여러분은 작은 마음을 모아 큰 희망을 만드는 분들”이라며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따뜻한 온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국회의장도 기부 문화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과 참석자들은 결핵 문제, 적십자사 운영비 지원 문제, 기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흥식 회장·김효진 기획조정본부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박선영 모금전략본부장,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최종현 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산타 분장한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어린이집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21일 성탄절을 앞두고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산타로 분장한 김 의장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캐롤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개최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이 12월 21일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료 국



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 조사로 선정하고 있으며, 작년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답변을 통계전문가 한양대 남은우 연구교수에게 통계 의뢰해 도출됐다.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35.6%),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5.8%), 의회민주주의 실천(18.3%), 정치적 리더십(7.3%), 언어구사(11.4%), 보편적 세계관(1.6%) 등이 꼽혔다.

백봉신사상은 2022년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NEWS

‘일하는 국회’ 홍보 우수부서 포상 수여식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2월 23일 국회접견실에서 2022년도 ‘일하는 국회’ 홍보 우수부서 및 미디어지원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국회방송국장, 정지은 문화통기획관 등 주요 간부들과 포상 부서장 및 미디어지원관 16인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12월 19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보도자료 배포건수와 보도자료 언론보도(인용) 회수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상 2곳(위원회·실국 각 1곳), 우수상 11곳(위원회 7곳·실국 4곳), 특별상(미디어지원관) 3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국제국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리국, 문화통기획관실, 법제실, 의정연수원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제국 미디어지원관이 각각 수상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는 전체 국가기관 중에 국민신뢰가 아주 낮다”며 “내년에는 점점 더 국민의 신뢰가 높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국회사무처,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국내외 주요 입법동향 공유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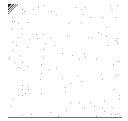
국회가 해외 주요 입법동향 및 법안·규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회사무처는 12월 21일 국회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피스컬노트와 양 기관의 국내·외 입법동향 등의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해외의 주요 입법동향 및 법안·규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법안·규제 정보 분석 기업인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국내·외 주요 입법 동향 및 법안·규제 정보의 상호 교환, 입법·정책 분야 AI 분석 기법 공유,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입법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스컬노트와의 업무협약이 해외 정보에 귀 기울이는 글로벌 국회의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재유 법제실장, 최은규 의회외교정책심의관, 팀



황 피스컬노트 대표, 손민경 피스컬노트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국회와 피스컬노트 간 국내·외 주요 입법동향 등의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입법동향 및 법안·규제 정보를 국회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시상식 개최



국회사무처는 12월 6일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대회는 국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로, 국회에서 열린 건 처음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본 경진대회는 국회 데이터(국회 OPEN API 등)를 활용한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앱 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앱 또는 웹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 또는 국회 업무 자동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선에서는 총 52팀의 작품 중 예선심사를 통과한 7팀(서비스 4팀, 아이디어 3팀)에 대해 참가팀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에게 수여되는 국회의장상은 관심 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과 법률안 통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는 웹서비스(제안명: “데이터와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커뮤니티! 정독!”)를 개발한 릴랩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청년 세대가 쉽게 정치를 접할 수 있도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정치 및 법안 관련 맞춤 정보 제공 아이디어(제안명: “MZ세대 맞춤 정치 정보 서비스, 청정숲”)를 제안한 청정구역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결과물의 완성도 및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 수상작은 혁신성 및 적합성, 발표의 전달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각종 기관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제 개방형 데이터에 기반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상자들의 출품작에 대해 “국민들에게 법률안, 국회의원, 청원 및 국회 문화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회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빛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어 “국회도 데이터의 개방, 활용 및 새로운 가치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본선 대회 격려사를 통해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데이터로 읽고 데이터로 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국가 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방데이터를 알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NEWS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9일 팩트북 2022-8호(통권 제100호)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

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국회도서관은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국가기관 내에 종합국력을 세밀하게 분석·축적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자국과 이웃 나라 및 핵심국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능동적으로 국가전략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합국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민간 싱크탱크 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2009년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결성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2014년 이후 추가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해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우리나라 종합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하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산정책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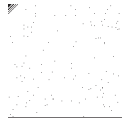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21일 국회 의정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향후 양 기관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전문가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경제·인문사회 분야 조사·기획·평가 등 협력 지원, 예·결산 정책과 연계한 전문분야별 인력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홍일표 사무총장, 윤두섭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와 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NEWS

및 지식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남아공 의회 예산상임위원회 대표단,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12월 7일 국회를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하원) 예산상임위원회 대표단과 면담했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진 남아공 의회의 이번 방한은 국회, 감사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법안·예산 심의과정 및 민간 기업의 발전사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소개받은 남아공 대표단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주요 보고서 주제 선정방법, 의정활동 지원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문의했다.

또한, 양측은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강화 방안과 한국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최근 고물가 상황과 대책, 양국 모두 정부부와 입법부가 다른 도시에 자리잡게 된 배경 및 향후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입법조사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해 매년 20여 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의회조사기

구 국제세미나에 남아공 측도 참여해주기를 권유했고, 김종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대표단의 금일 방문으로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남아공 의회와 우리나라 의회의 교류·협력이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공동 콘퍼런스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2월 1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과 미래 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미래사진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인 '성숙사회'는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상으로 △국가 주도에서 개인과 지역의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다.

미래사진전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미래의 징조를 나타내는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다. 미래사진전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미래의 희망, 기대, 걱정, 두려움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탄소중립의 첫 걸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22.3.25.]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국회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현선 입법조사관은 법 제정 이유에 대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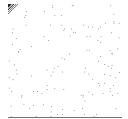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명시했다. 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책 컨트롤타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0월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위원회다.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한동희 기획평가과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



지난해 10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한편 석탄 발전 감축, 수소 암모니아를 활용한 새로운 무탄소 전원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원료부터 제품까지 산업 전주기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 절감을 위해 세제 혜택, 정책금융 등 지원 △신축 건물에 에너지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무공해차 보급을 통해 국토의 저탄소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의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동희 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이에 따라 정부는 대도시 집중형, 산업·발전 특화형, 복합형 등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

략’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자체별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지자체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동희 과장은 “법 제8조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2030년 목표로 설정돼 있어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 주기에 맞춰 20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글 박민선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환경노동위원회 2022-11-10 의결
본회의 2022-11-24 의결





계묘년 토끼띠해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구성 이진택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1월호부터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소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코너를 연재합니다.

인공지능

코로나19 전쟁에 투입된 인공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같은 용어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불편한 세상이 됐다. 음식점 예약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입된 인공지능이 응대하는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부조금을 보내려면 스마트폰에서 은행앱을 이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가장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비대면 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어릴 적 친구도 SNS를 통하면 몇 분 만에 근황을 알 수도 있고 다시 연락해볼 수도 있다. 신기술이 실생활에 녹아드는 결과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물론 신기술이 일자리 감소와 개인정보 유출을 촉발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뿐, 이러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인류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여러 기술 중에 인공지능은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작동한다. 사람과 대화하는 기능을 발전시켜서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구글에서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정 부분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도 하다. 공항에서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택시기사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외국어 통역 시스템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글로벌한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로부터 전쟁 지원 물품을 받고 있다. 무기와 각종 장비는 매뉴얼이 외국어로 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의 번역 기능이 지원되는 한 급박한 전쟁터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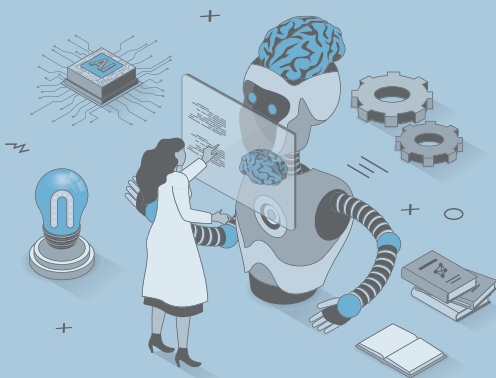


또한 인공지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은 다양한 기능을 모두 완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낼 수 있다.

코로나19와 인류의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무기는 가변형 유전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조금만 바꾸어 인류를 공격해도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인간이 귀로 인지하는 소리의 대역폭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원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실시간으로 상대하기 어렵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유전공학과 힘을 합쳐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 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공지능은 학습능력이 슈퍼컴퓨터의 속도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은 이러한 전염병의 연구에 최적의 실험실과 같다. 좁은 국토 면적에 국민의 수준도 높고, 다양한 분야에 4차산업의 최강국중의 하나다.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코로나19 자가검사 결과 키트를 복지부에 사진으로 전송하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공지능이 감염여부를 분석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전 국민의 검사 데이터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통제를 위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가상의 미래 세계를 다룬 영화에서 보여준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사람과 교류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상상은 이미 다가온 미래다. 어차피 이제껏 사람이 만든 자동차나 비행기, 잠수함 등도 사람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발명품이고 인공지능도 그러한 개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해서 사람의 도움이나 명령 없이 인간에게 해가 되게 행동하는 시절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접근으로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어서 미래를 어둡게만 볼 것은 아니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메타넷이플랫폼 고문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국민에 ‘친근한 국회’ 만들고 싶어



김다운
문화소통담당관실 행사담당

Q. 국회에서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 35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같은 해 8월에 입사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대학교 때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점차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이 생겼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공·진로체험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일반행정직렬로 합격했고, 입사 후 약 3년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률 등을 소관하는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행사담당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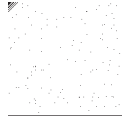
Q. 현재 근무하고 계신 문화소통담당관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소통담당관실은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직제’가 개정되어 기존의 홍보기획관실, 국제국 업무 중 일부를 이관 받은 문화소통기획관실이 신설되면서 동 부서 산하에 신설됐습니다.

문화소통담당관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문화소통계에서는 의정활동 및 국회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 의정활동 광고 기획, 국회수첩 기획·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계에서는 국회 주최 공식 의전행사와 대국민 소통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회보계에서는 의정활동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동정, 입법활동, 국회 세미나 등을 소개하는 국회보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Q. 문화소통담당관실에서 현재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요?

저는 행사담당으로 국회 주최 공식 의전행사와 대국



민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장단, 원내대표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국회 주최 공식 의전행사에는 연례적인 국립현충원 신년참배,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국회개원기념식, 제헌절 경축식 등과 일정한 주기하에 추진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식 등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는 국회문화극장(매월 셋째 목요일), 여의도 봄꽃축제 주관 국회개방행사(매년 4월),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음악회, 전시회 기타 행사들이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고요.

대국민 문화행사의 주된 취지가 문화를 매개로 한 국민과의 교류 및 국민의 국회에 대한 친근감 제고인 만큼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만족을 느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19년까지는 매월 개최했던 국회문화극장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혀 열지 못하다가 동년 6월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공연도 재개했습니다. 공연 당일 관람객들의 격한 환호, 앵콜, 뜨거운 박수갈채에 이어 공연 후 너무 즐거웠다며 거듭 인사하는 관람객들 덕분에 저도 다음 행사를 추진할 힘을 얻습니다.

Q. 올해는 국회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추진 중인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약 3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행사를 재활성하고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1월에는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향해 도약할 국민과 국회를 응원하기 위해 토끼 인형을 전시하고 국민소망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됐던 4월 국회개방행사와 5월 국회 동심한마당을 재개하고, 야간 개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일정한 주제가 있는 국회문화극장 등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검토해 대국민 참여도 및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시절 동기들과 여의도 봄꽃축제를 구경하다 우연하게 국회 경내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국회는 각종 참관, 문화행사, 전시회 등 국민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와 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 기능의 두 축인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국회 개방에도 힘써 국민이 국회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느끼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소통공간으로서의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문화소통담당관실에 지원한 초심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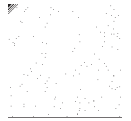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르디아스의 매듭과도 같다. 관료와 학자들이 모여 시시때때로 한국의 교육제도를 손질해 왔음에도 여전히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입시제도들을 연구해 거의 모든 입시 형태들을 다 적용해 보았지만, 왜 문제는 더더욱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입시제도’의 문제일까?

‘시험능력주의’의 저자 김동춘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은 더 나은 시험을 통해 사람을 선발하면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공교육의 붕괴, 가정의 해체 등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최적의 시험 방식을 도입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쯤 되면 시험을 통해 측정되는 수치가 개인의 능력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의 장점은 이 점에서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담론들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평가시스템의 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저 자 김동춘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22. 5.



저자는 시험을 통해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에 비판을 가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현장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학생들의 고통은 단순히 공부시간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인성과 자아가 무너지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손상되고, 사회적 윤리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 '시험성적'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시험능력주의'가 깔려 있다고 본다.

책은 한국의 시험능력주의의 지배현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험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은 비단 입학, 혹은 채용 과정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입시 결과, 한 번의 채용 결과는 마치 전근대 사회의 신분·지위처럼 평생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꼬리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평가하며 편가르기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꼬리표는 세대에 걸쳐 전승된다. 학력·신분은 사회 불평등의 산물이라면 동시에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를 얻기 위해 개인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전면전(全面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경쟁하도록 길들이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 학력 엘리트 그룹이 이 사회의 주요 요직을 과도하게 점령하는 과정은, 학력 엘리트 자신들뿐만 아

니라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학력 엘리트들이 아닌 사람들은 시험 결과에 의한 불이익을 승인하고 여기에 들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력을 통해 사회의 기득권이 된 이들은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와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주의의 공정함'으로 포장한다. 이 과정에 토를 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그 와중에 시험의 턱을 넘어 엘리트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학벌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다. 시험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험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천한 노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노동이 천한 것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들은 단순히 엘리트보다 좀 덜 벌고, 좀 더 힘든 일을 하고, 좀 더 긴 시간을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노동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을 대변할 목소리를 잃으며, 이는 학력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임금 노동, 산업재해, 부당한 노동관행 등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저자가 제시한 여러 문제 해결 방안 중 특히 능력의 검증 비용을 기업이나 대학이 스스로 부담하는 방안은 한국 사회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이다. 🍵

글 박효민(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북학론자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

18세기 후반 조선에는 실학사상과 함께 북학사상이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었다. 크게는 실학사상이지만 북학(北學), 즉 선진의 북쪽 나라에서 기술문명을 배워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 학자들을 북학주의자라고 호칭한다. 그 대표자가 연암 박지원이요, 조정 박제가(朴齊家:1750~1805)였다. 북학론자 박제가의 북학사상을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북학의(北學議)’였다. 박제가는 1778년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체제공을 수행하여 청나라를 다녀왔다. 발달된 청(淸)의 물질문화 상황을 각 방면에서 관찰하고 돌아온 뒤, 나라를 부강시키고 가난을 구제하는 길은 이용후생(利用厚生)에 필요한 선진적인 청의 기술과 도구를 배워서 국가의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북학의’를 저술했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은 모두 조석거리를 걱정할 정도다. 10여 호 되는 마을에서 하루에 두 끼 먹는 집이 몇 집 없다.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것이라야 옥수수 몇 자루와 고추 몇 십 개가 거적 그을음 속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 시골 백성들은 1년에 무명옷 한 벌을 얻어 입기 힘들고, 남자건 여자건 평생 동안 이부자리를 구경도 못 한다. 짚자리로 이불을 삼아 그 속에서 자

손들을 기른다. 아이들의 경우는 10여 세 전후까지는 겨울이나 여름의 구별 없이 벌거숭이로 다니며, 세상에 버선이나 신이 있는 줄조차 모른다.(‘북학의’ 농잠총론)”라는 내용이 당시 박제가가 살펴본 백성들의 삶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목격한 박제가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 때문에 북학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구제책의 하나로 ‘북학의’를 저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제가는 체제공을 수행한 북경 방문 이후에도 1790년 5월과 10월, 1801년 2월에 걸쳐 전후 네 차례나 중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방문 때마다 청나라의 물질문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계책을 세우는 자료로 삼았다. 개혁사상으로 정리한 그의 ‘병오소회(丙午所懷)’나 ‘소진본북학의(疏進本北學議)’를 국왕에게 건의했으나 끝내 그의 사상은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기회를 얻지 못해, 나라의 개혁은 이룩되지 못한 망국의 길을 걷고 말았으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북학의’는 내외(內外) 2편으로 되어 있다. ‘내편’에는 거선(車船)·성벽(城壁)·궁실(宮室)·도로(道路)·교량(橋





梁)·목축(牧畜)·시가(市賈)·금철(金鐵)·재목(材木)·여복(女服)·장희(場戲)·어역(語譯)·당보(塘報)·궁시(弓矢)·서화(書畵) 등 29항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 설명하고 있다. ‘외편’에는 전분(田糞)·상(桑)·농잠총론(農蠶總論)·과거론(科擧論)·관론(官論)·녹제(祿制)·재부론(財賦論)·통강남(通江南)·절강상선의(浙江商船議)·장론(葬論)·병론(兵論)·존주론(尊周論)·북학변(北學辨)·응지진북학의소(應旨進北學議疏) 등 17항목의 논설을 수록해 농업기술의 개량과 국내 상업, 외국 무역의 이점을 설파해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했다.

그러한 애국자들이자 실학자들의 간절한 개혁사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당시 학계의 풍토에 있었다.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나라가 반드시 망하리라고 예견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자는 실학자들의 생각은 주자학과 존주대의론에 밀려 오히려 비난받고 미움을 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비록 사·농·공·상의 사민(四民)의 구별이 있었지만 특히 공·상(工商)의 직업은 천대받고 주류에 끼지 못한 시대였는데, 상공업의 발달로 부국강병을 이룩하자는 논리에 주류 세력들이 동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음은 역사의 비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내고 가난에 찌든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고, 실학사상과 북학론을 펴던 학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선각자들이요, 개혁론자들임에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학의’ 한 편의 고전은 선각자들의 대안론이자 이용후생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제적 개혁안이자 실천 방안의 하나였다.

오늘의 자본주의 시대야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여 상업과 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생활이 많이 풍족하게 되었지만, 200년 전의 시대인 18세기 말 전통적인 주자학의 공리공담, 풍수설, 지리도참설 따위의 허위적인 논리가 주조를 이루던 상황에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공업 장려의 주장은 실사구시적 실학정신이였다. ‘북학의’는 바로 실학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턱도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실학 자체요, 실학이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는 가장 뚜렷한 상징물이다. ‘북학의’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후생의 실질적 효과를 얻어내는 일이 바로 실학이다.

박제가는 적출(嫡出)이 아니어서 신분차별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출세에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시문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아 정조대왕의 예우를 받아 검서관에 올라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진적이고 선각적인 정신이 투철해 시대를 변혁시킬 ‘북학의’를 저작할 수 있었다. 시문이 뛰어나 청나라에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연암 박지원의 문하에 들어가 함께 시대를 바꿀 북학사상과 이용후생의 논리를 세상에 심어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북학의’는 ‘목민심서’와 함께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려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전이다. 문제는 그런 고전을 이름만 알고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에야 물질문명이 매우 발달하였지만 암흑의 시대에 그런 선진적인 주장을 폈던 박제가의 북학정신은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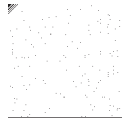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빛장을 연 주역들



이승만 의장, 신익희 의장, 이동녕 의장(왼쪽부터)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의 빗장을 연 인물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조선의 폐망 이후 3·1운동을 거쳐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탄생했다. 이렇듯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국체를 탄생시킨 수많은 역사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동상이라는 상징정치를 통해 내세우고 있는 인물은 3인이다. 국회 중앙홀에 있는 이승만과 신익희, 이동녕이 그들이다. 이 3인의 역사적 인물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3인만으로 대한민국 국회 역사를 갈무리할 수 있을지를 반문한다면, 국회는 아직도 채울 여백이 많은 곳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과 신익희, 이동녕의 동상

이승만(1875~1965)은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지냈다. 고종이 임금을 하던 1875년에 태어나 구한말 격변기에 5년 넘게 옥살이를 한 개화파 인물이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국무위원,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을 지냈으며 미국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해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거쳐, 1948년부터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국체를 유지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으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혁명으로 하야했다. 건국과 독재의 공과 논란 사이에 선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 이승만은 그러나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빗장을 연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은 분명하다.

신익희(1894~1956)는 조선 말에 태어나 일본에 유학한 그는 유학생들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다. 귀국 후

동명강습소,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17년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수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수립 후 주요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임시정부 내무부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한 그의 발길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다. 그는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 되었으며, 대한국민당 대표로서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 국회 부의장을 거쳐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1955년에 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표로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그는 오늘날의 민주당이 정당의 뿌리로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동녕(1869~1940)은 서전의숙, 신민회, 한국국민당 등을 조직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행정가다. 그는 조선 말에 태어나 진사 시험에 합격한 선비로서 독립협회에 가입해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국권회복 운동을 벌이다 1906년 만주로 망명해 이상설, 여준 등과 서전의숙을 설립, 민족교육 운동을 하다가 귀국해 신민회를 조직했다. 1910년 망국 이후에는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종교에 입교했으며,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무오독립선언서 연서, 대한독립선언서 참가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임시정부 국무총리, 임시정부 국무령, 주석을 지내며 활동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그는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 제1선의 인물이다.

70여 년 역사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많긴 하지만, 이승만과 신익희는 대한민국 거대 양당의 역사적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동녕은 구한말부터 임시정부에 이르는 독립운동의 상징 인물이다. 그런데 이동녕은 전신상이 아닌 흉상으로 세웠다. 같은 공간에 세워진 조



국회 본관 중앙홀에 설치된 신익희, 이승만, 이동녕 동상(위)과 맞은편에 있는 빈 좌대(아래)

각상으로서의 우선 형식미에 맞지 않고, 인물의 비중으로 봐도 격에 맞지 않는다.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지낸 분을 홀대하는 공공미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론이 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공공미술은 엄격한 형식미로부터 그 내재적인 뜻을 발현한다. 좌대와 형상의 규모와 자세 등 형상의 외형적 표상에 사건과 인물의 서사를 담아내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시 한번 공론 과정을 거쳐 이동녕 인물상의 재제작을 기대한다.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빈 좌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3인의 동상만이 아니다. 맞은편에 있는 빈 좌대에 담긴 뜻을 새겨볼 일이다. 빈 좌대는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채

우지 못한 역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국회는 빈 좌대를 설치해 두었다. 지금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빈자리를 마련해 놓은 국회의 상징정치를 공공미술에 주목하는 미술평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치며 응원한다. 그것은 국회라는 정치의 장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 새로운 공론장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응원하는 장치다.

이 빈 좌대가 새로운 인물을 국회 중앙홀에 모시는 창의적인 예술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새롭게 채워질 국회의 역사인물의 자리를 보며 민의 수렴의 전당 국회가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임을 다시 생각한다.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



365일 일하는 국회 전국 어디서나 같은번호

IPTV

65

olleh tv Btv



skyLife 케이블 방송

165

※ 일부지역 케이블TV는 번호상이

전국
채널번호

국회방송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송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국회방송 앱



● 소셜미디어 채널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발언시간 제한이 없던 그 시절

제헌국회부터 제7대국회까지는 의원의 장시간 발언이 종종 있었다. 제헌 때 제정된 국회법 제46조¹⁾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대국회(1954.5.31.~1958.5.30.) 박영종 의원은 본회의에서 368번의 최다발언을 했고, 또 제24회 제31차 본회의와 제25회 제27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약 3시간여의 발언, 제26회 제69차(1957.12.31.) 본회의에서는 ‘민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민참의원선거법) 제1독회’ 건에 대해 약 7시간 동안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57년 12월 31일 열린 제26회 제69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5분에 개회했는데 의사일정에 없던 민참의원선거법이 상정되자 민관식 의원의 대체토론을 필두로 하여 박영종 의원의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밤 12시가 되자 조경규 부의장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전몰군경에 대한 묵념을 하자고 제안했고, 휴식을 위한 두 차례의 짧은 정회 후에 계속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은 다음 날인 새해 1월 1일 새벽 4시 35분에 산회하면서 끝이 났다.

<제3대 제26회 제69차(1957.12.31.) 본회의>

- 민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1독회(계속) -
(.....)

○부의장 조경규 (.....)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초가 지나면 신년이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금년 이해는 남북통일을 기원하

고 또 우리 민주정치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전몰군경을 위해서 잠간 명복을 비는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종소’ 하는 이 있음)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일동 묵념)

앉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해 주세요.

(‘역사가 바뀌어졌으니까 정신 바짝 채립시다’ 하는 이 있음)

○박영종 의원(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흔두 살이 되었습니
다. 그러니 정신을 더욱 차려야 되겠습니다……

(.....)

○부의장 조경규 박 의원! 그러면 마이크를 떠나서 잠간 이리 오세
요.

(부의장과 박영종 의원 잠시 상의)

지금 박 의원과 좀 사적으로 의논해 보았는데 곧 시간이 금방 끝나
지 않겠다고 그러합니다.

(.....)

그러니 밤 6시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4291년 1월 1일 상오 4시35분 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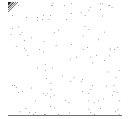
장시간 발언으로 인해 안건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제6대국회 제41회 제19차 본회의(1964.4.20.)에서 김대중 의원은 ‘국회의원(김준연) 구속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 구속동의안이 처리되면 안 되는 이유와 그 부당함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시작했다.

이효상 의장이 국회법 제97조²⁾에 의하여 발언시간

1) 국회법 제46조(1948.10.2. 제정)

2) 국회법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발언시간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1963.11.26.)



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몇 차례 발언 종료를 종용했지만 김대중 의원은 의장이 발언중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갔고 장내가 소란해지자 결국 오후 7시 56분 이효상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5시간 19분 동안의 장시간 발언은 끝이 나고 결국 그날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제6대 제41회 제19차(1964.4.20.) 본회의>

-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오후 2시37분)

○의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데에 조금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의원 외 25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중 의원……

○김대중 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마 개원 이래로 가장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우기 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같이 원내 교섭단체의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김준연 의원이 오늘 제3공화국의 제6대 국회가 개원되어서 처음으로 이 의원체포에 대한 동의요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효상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 의장의 직권으로써 중지하시고 하단하시기를 명령합니다.

(……)

이제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과 충분히 의논한 결과에(……)

거기에는 국회법 제97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제한하고… 또 총무단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각파의 대표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외의 토론은 일절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은 틀림없이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그러한 모든 합의하에서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

니다.

(……)

(장내 소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7시56분 산회)

유신정권이던 1973년 2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97조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발언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몇 차례 개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한동안 볼 수 없었다.

이후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당에게도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토론을 통해 쟁점 안건을 처리하자는 법적 수단으로 무제한토론³⁾이 신설됐고, 수십 년 만에 본회의에서의 장시간 발언 기록들이 갱신됐다.

제19대국회 제34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토론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총 38명의 의원이 참여해 192시간 25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이라는 발언시간을 기록했다.

당시 국회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 줬던 무박 9일간의 무제한토론은 전 국민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의였으며 그때의 모든 발언은 무려 1천696페이지에 달하는 국회회의록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

글 강지유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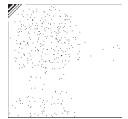
3)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사라오름에서 본 한라산 설경

찰랑찰랑 신비의 산정호수 품은 작은 백록담

제주 사라오름



남쪽나라 제주도는 오름의 천국이다. 오름은 큰 화산의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을 말하는데, 제주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보물들이다. 특히 한라산 자락에는 작은 기생화산의 흔적인 오름이 386개나 된다. 그중에서 ‘작은 백록담’으로 불리는 오름이 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라오름’이다. 이 오름은 다른 오름들과 달리 정상 분화구에 태고의 신비 가득한 산정호수를 품고 있다. 그 모습이 꼭 백록담을 닮았다.

한때 출입이 금지된 땅이었던 사라오름이 일반에게 개방된 것은 10여 년 전에 불과하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참 신선했다. 이름이 주는 묘한 끌림이 있어서다. 이곳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주인공 사라가 겹쳐 떠오르기도 했고, 그만큼 매력이 넘치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며 사라오름을 향한 여정을 꿈꿨다.

‘사라’의 어원을 찾아봤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사라’라는 신성한 산이나 지역을 의미하고, 불교적인 의미로는 ‘깨달음’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한다. 불교적 영향을 받은 제주의 지명인 셈이다.

이름처럼 사라오름은 제주인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6대 명당이 유명했는데, 사라오름 분화구는 제주도 6대 명당자리 중 제1명당자리로 대우받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면 기운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의 형국이며, 왕후지(王候之地)의 길지라고 한다. 분화구에 수증기가 있었다는 전설이나, 오래전 불이 났는데, 분화구 안쪽은 멀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사라오름으로 향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의 숲

한라산 7부 능선쯤에 자리한 사라오름으로 가는 길은 백록담 출발점인 해발 750m의 성판악휴게소에서 시작한다. 이곳에서 해발 1,324m 높이의 사라오름까지 6.4km의 오르막이 계속되지만 급하지 않고 완만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무엇보다 뾰뾰한 나무숲 속을 걸어가기 때문에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라오름 분화구에는 작은 백록담으로 불리는 호수가 있다.

편이다. 왕복 4시간 30분 정도는 잡아야 한다.

겨울 한라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와 신고 아이젠을 꼭 챙겨가야 한다. 성판악 코스에 들어서면 초입부터 숲길로 접어든다. 맨 먼저 굴거리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팽팽나무, 때죽나무, 솔비나무 등 큰 이름표를 단 온대림 수목들이 탐방객을 반긴다. 또 숲길을 걷다 보면 가끔 노루와 토끼, 다람쥐 등을 만나기도 한다. 이 코스는 가파른 오르막이 별로 없고 탐방로가 잘 정비돼 있어 걷기에 힘들지 않다.

성판악휴게소에서 2km 거리에 있는 구름다리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숲길이 계속된다. 한여름에는 숲이 하늘을 덮어 터널을 만들 만큼 울창하고, 눈이 내린 겨울에는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 장관이다. 특히 1시간가량 걸었을 때 만나는 해발 1,000m 지점에 위치한 삼나무 군락지는 이 코스의 백미다. 하늘로 곧게 뻗은 시원한 삼나무들이 푸른 잎을 드리우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이라니,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되어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한겨울, 이 삼나무 숲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상상해보라. 하늘로 곧게 뻗은 삼나무가 눈을 뒤집어쓰고 축축 늘어진 모습은 북유럽의 은빛 설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름답다.

울창한 삼나무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곧 속밭대피소가 나온다. 이곳에서부터는 다소 경사가 급해지지만, 곧 사라오름과 백록담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왼쪽 나무데크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20여 분 거리에 사라오름이 있다.

제주에서 오름은 어느 곳이나 명당으로 통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사라오름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소문나 있다. 후세에 왕이 나오기를 바랐던가. 많은 제주 사람들은 죽어서 이곳에 묻히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묘를 쓰려고 해발 1,324m 사라오름까지 주검을 지고 오르는 이가 많았다. 지금도 사라오름 주변에 묘지가 여러 개 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림같은 풍경

사라오름으로 들어가는 나무데크를 따라 20여 분만 가면 어느 순간 시야가 확 트이면서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너른 분화구가 나타난다. 태고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듯한 작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호수 둘레는 약 250m, 축구장만한 크기이지만 뿔어져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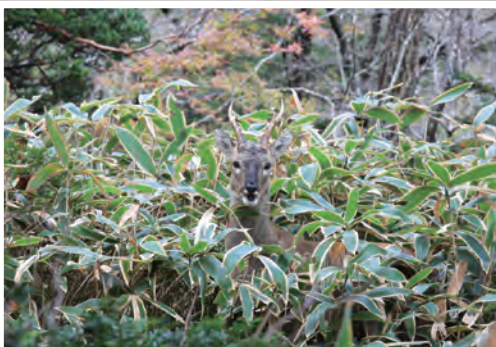
이 호수는 백록담을 제외하고 한라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정호수이며, 한라산에 사는 노루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다. 호수의 수심은 그리 깊어 보이지는 않는다. 가을 때는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연중 물이 고여 있으며,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차올라 호수 주변의 나무데크도 잠기곤 한다. 물이 가득 차 찰랑거릴 때는 파란 하늘빛을 그대로 담고 있어 더욱 신비롭다.

호수 가장자리로 길게 이어진 데크를 통과해 숲 사이로 난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면 사라오름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압권이다. 가히 제주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발아래는 그야말로 일망무제의 풍경이 펼쳐진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서귀포 시내와 섶섬 지귀도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부터 길게 펼쳐진 한라산 자락으로 크고 작은 오름들이 고개를 내밀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의 파노라마다.

고개를 위쪽으로 들면 한라산 정상이 우뚝하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풍경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라오름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귀포 전경



등산로에서 만난 노루

일몰이 되기 전 산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사라오름에서 1시간 거리의 진달래 대피소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입산 통제 시간은 계절마다 다르기에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체력을 따져 여의치 않으면無理하지 말고 사라오름에서 하산하는 것이 좋다. 사라오름을 보고 온 것만으로도 감동은 충분하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겨울에는 눈에 덮인 그림 같은 한라산 설경을 마주할 수 있다. 겨울에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본 특별한 풍경은 2시간 넘게 이곳까지 땀 흘리며 걸어온 수고를 한순간에 날려준다. 고지대의 번덕스러운 날씨는 때로 구름의 조화를 부려 이 아름다운 풍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히면 그 모습은 더욱 신비스럽다.

사라오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있다. 내친김에 백록담을 보고 가려면 길을 서둘러야 한다. 다시 사라오름 분기점으로 내려와 위쪽 오르막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대중교통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5.16도로를 경유, 서귀포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40분 정도 걸린다.



자동차를 가져가면 서귀포와 제주시를 잇는 5.16도로를 따라 가면 성판악휴게소가 나온다. 성판악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산행을 하면 되는데, 주말에는 주차하려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문법에 맞는 문장과 명료한 의사 전달

공문을 읽다 보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문장은 잘못된 경우를 더러 발견한다. 우리가 문장을 사용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문(非文)이 보인다고 해서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나빠질 뿐 아니라 전달하려는 논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게다가 너무 잘난 체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나 역시 주변 사람들의 언어생활 과정에서 발화되는 문장이 잘못되었을 경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굳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이야기의 맥락을 끊고 싶지 않다는 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문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애초에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올바른 문장, 즉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일이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문장을 써 왔던 탓에 무엇이 이상한지를 금세 알아채지 못하는 예를 들어보자.

(가) 인간은 자연에 복종도 하고 지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행사에 부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문장을 읽어 보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거기에 무슨 오해가 생길 것도 아니다. 게다가 문장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딱히 지적하기도 쉽지 않거나 애매하다.

(가)의 주어는 ‘인간은’이고 서술어는 ‘살아가는 존재다’이다. 그 사이에 두 개의 문장, 즉 ‘자연에 복종도 하고’와 ‘지배도 하면서’가 들어있다. 문제는 ‘자연에 복종도 하고’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지만 ‘지배도 하면서’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라는 점이다. 즉 ‘지배도 하면서’ 앞에 ‘자연에’가 생략되었다고 보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이어 붙였지만, 타동성(他動性)을 강하게 가지는 ‘지배’ 앞에는 목적어가 와야 자연스럽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아래의 (가-1)처럼 쓰면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가-1) 인간은 자연에 복종도 하고 그것을[자연을] 지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다. 위의 문장대로라면 주어와 서술어가 ‘아뢰올 말씀은 …… 바랍니다’가 되므로 문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이 된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치면 좋을 것이다.

(나-1)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행사에 부디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 보면 문법에 맞는 문장이 읽기에도 편하고 의미 전달도 한결 정확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귀찮다고 해서 비문(非文)을 흘려보내지 말고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고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언어생활이 편리해진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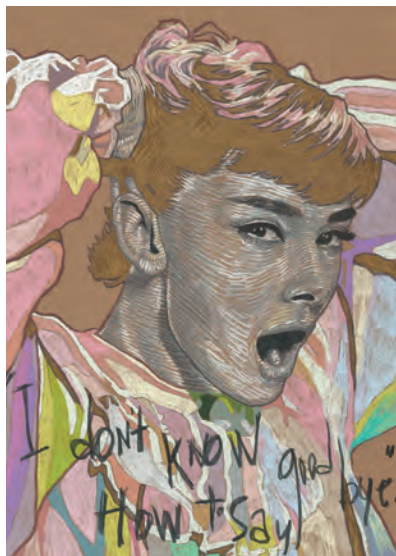
국회 ART GALLERY 1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장소와 기억

2023. 1. 2. - 1. 13.

작가 : 서유진 | 추천 : 서일준 의원실



celebrity

2023. 1. 16. - 1. 30.

작가 : 민지훈 | 추천 : 소병철 의원실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12월 2일	• 김진표 국회의장,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
12월 6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에서 응우옌 쉰웬 폭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외교 등 현안 논의
12월 8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
12월 10일	•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12월 11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혀
12월 13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
12월 14일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혀
12월 15일	•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023년 예산안 ‘2차 중재안(법인세 1%p감세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 불발
12월 19일	•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 국민의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명단과 현장조사, 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
12월 21일	•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에서 마르첼 치울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 논의 •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상 수상
12월 24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8조7천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의결
12월 26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사에 정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12월 27일	•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열려

정리 윤성혜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국회방문객이 찍은 국회 사진 공모



주제 국회의 풍경

참가자격 국회를 방문한 사람 누구나

내용 사진과 촬영이유, 사진설명
• 국회의 풍경이나 국회를 찾은 방문객,
국회 실내 모습 등의 사진과 짧은 설명(2~3문장)

응모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촬영 날씨가 보이게)
• 사진 및 설명을 이메일로 제출
(book@assembly.go.kr)

마감 매달 20일

규격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용량의 JPG, JPEG 파일형식
원본 창작사진 (디지털 합성 등 수정 변형불가)

시상 선정 시 원고료 10만 원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058)

- 매월 1편씩 선정하여 국회 월간지 국회보에 게재 예정.
-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품 등 이유로 저작권 문제 발생시 선정 취소

